

광복 10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의 과제 --- ‘세계요청’ ‘세계 선도’ ‘세계 역할’ ‘세계기여’

박명림(연세대 교수, 김대중도서관장,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소장)

세계 현실, 그리고 한국의 “세계 역할”(world role/world mission) 요청: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의 중첩과 병진

== 우리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광복 100년의 요청 중의 요청은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이라고 할 수 있음. 두 지향 목표는 사실상 하나임. 국민동행 없는 바람직한 민주와 평화도, 세계동행 없는 바람직한 민주와 평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임.

== 현재 인류의 가장 심각한 현상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동시 위기. 이는 현대 세계의 최초의 ‘부정적’ 조합 상황. 즉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견인하던 근대 이래 세계 진보와 발전의 결합 동학과 공식이 본격적인 분리와 해체 국면에 돌입. 요컨대 세계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중 위기에 진입. 게다가 오늘의 인류에게는 심각한 기후생태 위기도 중첩.

특별히 세계화, 자유화, 민주화 30년의 결과가 국내적으로는 압도적인 전제화 (autocratizing), 우경화, 그리고 양극화, 국제적으로는 탈세계화, 자유주의 국제질서 해체, 난민급증과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세계화-자유화-민주화 및 승리주의의 절정의 시기에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탈자유주의화(post-liberal international order, G. John Ikenberry),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S.N. Eisenstadt.)의 급속한 진행은 현대 세계사와 인류사 전체의 최고의 역설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

첫째 무엇보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핵심 국가들조차 거의 전부 심각한 역전과 위기에 진입. 이른바 전제화와 탈민주화를 말함. 이는 객관적인 주요 국제조사의 지표와 조사, 통계의 일치된 견해.(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 V-Demo 2025: Demo Finland 1993-2023.)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심각한 우경화와 내지는 전제화의 위기를 노정. 사실상의 극우 정당·정치인·정책들이 대중과 정부를 장악한 경우도 다수.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와 비(非)자유주의체제의 득세는 일반적 현상.

둘째 민주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평화 수호와 방벽 기능의 현저한 약화와 동시에,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역할 점증. 특별히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선도 국가의 탈세계화와 탈자유주의화 주도는 가장 심각한 위기의 한 요인. 미중 대결과 갈등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세계질서의 결정요인으로 등장. 그러나 두 세계제국 모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서 보듯이 이제 보편은 제국의 국익과 국가가치의 하위 요소로 밀려남.

게다가 세계평화의 경우 오랫동안 세계 민주국가들이 우려하던 위험성 --- 즉 시진핑 체제 하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대한 비판과 경고 ---을 넘어 반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체제의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란에 대한 침공을 감행. 수정주의, 또는 현상변경 세력이라고 비판받던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현상유지 세력이며 평화 수호세력이라는 역설적인 현실까지 등장. 실제로 만약 현재에 중국마저 타이완을 침공했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유럽, 중동, 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이 모두 전란에 휩싸이는 초유의 세계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을 것. 그러나 민주주의는 물론, 중국이 보편평화의 인류 가치와 역할 책임을 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셋째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세계의 구(舊) 자유세력, 민주진영, 또는 평화진영 내부의 분열과 대립. 세계화와 함께 등장하였던 대서양분열(the trans-Atlantic divide/the divided West. J. Habermas)은 이제 관념과 진단을 넘어 명백한 현실로 대두. 이는 향후 세계질서에는 미·중 사이의 태평양 갈등(the trans-Pacific conflict) 못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세계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미·중 갈등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구(舊) 자유주의 세력의 위축과 내부 갈등. 심지어 서구없음(Westlessness)과 서구패망의 문제까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0)

== 이러한 세계상황과 세계현실에서 광복 100년을 향해 오늘과 내일의 한국은 자신과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래로 확인된 역사법칙에 따르면 문명 대전환기에 기존 중심은

항상 보편을 보지도 유지하지도 만들지도 못함. 그것은 언제나 경계국가와 경계지역에서 솟아오르고 빚어짐. 경계는 기존 문명과 문명, 제국과 제국, 가치와 가치의 접촉과 교류와 겹침의 교량이자 가교요, 전방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 표준과 새 가치와 새 문명 창출의 선도 역할을 수행해옴.

인류문명 형성과 대결과 변천의 네 번째 기축이 ‘오리엔트 지방’,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으로 이동해온 미중 대결 시대에 그 미중 대결의 정중앙인 대한민국은 광복 100년을 맞아 자기를 넘어 왜 세계 역할과 세계 소명을 요청받고 있으며, 과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국민동행”은 그 출발이며, “세계동행”은 그 귀결이 될 것임.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그 필요조건이며 “정의로운 평화”는 그 충분조건이 될 것임. 과거의 성취는 현실과 미래 요청의 근거가 된다.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세계의 요청(Postulate)은 곧 개별과 도덕을 넘어 마땅히 경계의 새 보편과 새 주체에 의해 추구되고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mmanuel Kant)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경로의 ‘세계위치’ ‘세계역할’과 ‘세계기여’ 출발과 양태

== 초기 광복 시기와 세계질서/세계대결의 소우주(microcosm) : 한국은 두 개의 전체주의 사이에서 일종의 부분적 민주주의,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 (wehrhafte/streitbare Demokratie. Karl Loewenstein)로서 반공 권위주의 국가를 건설. 세계 진영대결이 현실인 조건에서 경계국가로서 ‘국제적으로는’ 불가피한 서방 정책.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후 11개의 연합점령대상국가(독일,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한국, 베트남, 중국,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정밀 비교할 때 내부의 연합·연립·통합을 통해 분할점령과 분단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후에는 독일)에는 현저히 부족. 외려 격렬한 내부 진영충돌을 통해 세계대결과 세계충돌을 앞서나가며 세계냉전의 세계분단과 세계열전화, 그리고 세계평화 파괴의 한 진앙 역할을 선도.

== 당시는 일본 군국주의(militarism)와 소련 공산주의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소명. 전자는 2차대전, 후자는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 연합진영, 자유진영, 민주진영과 함께 극복. 국제연대와 지원을 통한 전체주의 구축과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2차대전/한국전쟁). 한국광복과 한국전쟁의 세계적 의미. 특히 냉전 시기 내내 한국은 세계 자유진영의 전방 초소이자 전초 기지 역할. 한국전쟁이, 발제자의 오랜 주장처럼, 내전과 국제전을 넘어 세계내전(global civil war)이었던 이유. 세계 두 진영의 자유와 혁명, 민주와 급진주의의 대결인 동시에 한국의 좌파와 우파, 남한과 북한의 내부대결을 동시에 내장하고 양측이 상호 견장.

한국전쟁과 남북대결에서 한국의 패배는 세계 자유와 민주진영의 동아시아에

서의 패배를 의미. 따라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세계 및 아시아 전방 초소로서 전쟁재발 방지 = 평화수호 역할 담당. 이 점은 서독과 동일. “독일의 베를린장벽에서 한국의 군사분계선까지”가 세계 사회주의 진영. 그 밖은 세계자유진영. 전자의 붕괴와 후자의 유지에 한국문제와 독일문제, 유럽평화문제와 동아시아평화문제의 가장 큰 차이가 존재. 전쟁의 유무가 가장 결정적.

특히 초기 시기 한국전쟁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사태는 세계문제와 세계상황에 즉각적으로 심대한 영향. 이른바 고전적인 “세계질서형성 전쟁”으로 기능. 한국전쟁으로 인한 세계 진영 구도의 고착 및 한반도문제의 세계화, 세계중심문제화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와 구조적 안정화는 막대한 자기 희생을 통한 의도하지 않은 세계평화 기여.

== 세계 두 진영 사이의 세계 전방초소로서 “제도적 민주주의 수호, 실질적 권위주의 실천”의 조합이라는 초기 단계를 지나 두 번째 단계부터 한국은 세계 일반과는 다른 “민주주의로의 한국적 길”을 밟음. 즉 세계내전을 경험하고, 세계대결의 전방초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한 압력을 딛고 강력한 반독재·민주화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구축을 선포한 세계 범례 역할 수행. “급속한 경제발전”과 “강력한 민주적 저항”을 병행한 특이한 사례. 이를 통해 한 세대 반 만에 약소국가-빈곤국가-권위주의 국가에서 중진국-중견국을 거쳐 선진 민주국가와 준강대국에 진입.

==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 경로는 정당경쟁과 의회주의, 선거주의와 연합정치의 경로. 아니면 만성적 정치불안과 역전. 대부분 이들 둘 중의 하나. 그러나 한국은 평시에는 선거와 정당을 통해, 결정적 국면에서는 끊임없는 시민저항을 통해 민주주의 열망과 회복력을 반복적으로 재현. 공산주의로부터 제도적 민주국가의 수호 이후 권위주의의 결정적 계기마다 1960년 4월봉기를 통한 이승만정부 전복,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79년 부마항쟁을 통한 박정희정부 전복,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을 통한 전두환 정부 붕괴가 전부 아래로부터의 시민저항. 권위주의체제의 연속 등장, 그리고 건국, 산업화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옴.

== 세 번의 권위주의 정부가 모두 시민저항과 민중봉기를 통해 전복되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 이러한 격렬한 갈등을 노정하면서도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 1988년에는 이미 당시 국제기구가 인정하듯 ‘제1세계’에 진입 (IMF/IBRD 1989. Adam Przeworski). 2차대전 이후의 주권회복 국가로는 최초 사례. 지속적으로 매우 격렬한 갈등을 통한 근대성(주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등, 교육, 사회, 문화)의 성취라는 특이한 경로를 실현.(S.N. Eisenstadt). 갈등의 생

산적 창조적 역할(Lewis Coser)을 현시한 대표적인 발전 경로이자 국가.

==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는 평화 회복력과 평화적 안정을 위한 한반도문제 구조전환에 돌입. 한국전쟁을 통한 동아시아 열전의 진앙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역할 전도 추구.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국·동(東)유럽 - 한·소 - 한·중 수교를 주도. 전방위 국제관계를 구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합의도 민주회복 이후 평화 회복력의 주요 사례들.

민주주의의 평화로의 파상(波狀)효과. 세계적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미·중 협조체제(US-China Concert, US-China Symbiosis)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선도. 냉전의 진앙으로부터 큰 전변. 그러나 한중 - 한소 수교에 조응하는 북미-북일 수교의 실패는 한반도 항구 평화의 정착에 가장 큰 실패 요인의 하나.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는 아시아 최선두권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선두권 임.(Freedom House: UND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치 상태에서, 냉전시대와 탈냉전·세계화 시대를 통틀어 한국이 시민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를 선도한 것은 분명 일정한 세계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민주국가, 중견국가를 거쳐 현재의 세계적 위상인 선진민주국과 준강대국(semi-great power)에 진입. 구체적인 규모, 순위, 그리고 지표를 볼 때 종합국력은 물론 경제, 무역, 산업(제조업/첨단산업 모두), 기술, 방산...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명백히 국민국가 수준을 초월. 그 부분의 세계를 향한 경쟁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또는 EU). 한국의 핵심국력(GDP, 무역, 국방비) 비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나 아프리카 55개국 전체와 대등(아프리카와의 GDP는 일정한 차이). 교육, 수명, 건강, 인권, 민주주의는 국가별, 인구별 지표 순위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자 세계 선두권. 문화예술 부문의 한류의 세계 위상도 압도적.

그러나 자살, 저출산, 비정규직, 자영업, 남녀임금 격차, 노인 빈곤, 시위, 지역소멸, 학교소멸, 선거불비례성, 사회갈등지수 역시 선진국 중 세계 최악 수준. 따라서 빛과 어둠, 최고와 최악, 즉 한국기적(Korean Miracle, 그리고 Korean Dream, Korean Wave, Korean Model을 포함하여)과 한국참상(Korean Tragedy/Korean Disaster)이 함께 하는 일종의 한국 수수께끼(Korean Mystery/Korean Enigma/Korean Conundrum). 문제는 이러한 어둠의 지표들, 이를테면 자살, 저출산,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학교소멸, 기후생태지표... 등이 민주화 이후 빛의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

특히 여러 국내·국제지표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특이하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국가 지위를 놓치지 않음. (Arend Lijphart, Ipsos, 2021, Pew Research,

2022. 국가데이터처 2025...). 시위 강도, 횃수, 지표는 외려 민주화 이전보다도 민주화 이후가 모두 더 높고 더 많고 더 넓음. 즉 더 갈등적임. 이는 국가제도(선거/정부/의회/정당/법원)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와 문제해결 기능이 현저히 약하고 부족하다는 방증임. (졸저. 근간 <<인간국가의 조건>>). 헌법개혁을 포함해 광복 100년을 향한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가 제도혁파와 혁신이라는 점을 증거.

자기와 세계의 민주회복력(Democratic Resilience)과 평화회복력(Peace Resilience)을 위한 한국의 '세계소명'과 '세계역할책임'

== 세계화, 자유화, 민주화 30년의 결과는 인류의 인간성(humanity), 민주주의, 평화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움. 이러한 결정적 시점에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해온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음. 한국과 세계,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경로와 모델을 통합하고 표상하는 세계모범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함.

== 세계적 우경화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최근의 '헌법위반 정부 둘'을 대규모 시민저항과 의회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에 성공함(2016/17, 2024/25). 한국은 (강한 반공 보수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극우의 정치적 대표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집합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력의 반복은 좋으나, 최고 수준의 갈등을 완화할 정치적 리더십과, 연립과 연합이 가능한 제도적 기제의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정부 교체에 따른 심각한 정책적 단절의 극복도 필수임. 결국 일반적 정당모델과 한국의 시민모델의 결합을 통한 대안의 통합적 구축은 오늘의 세계 위기를 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평화회복력의 과제는 '공화적 평화'가 해법임. 이것은 이론과 현실에서 현재까지는 인류의 가장 적합한 검증된 경로임.(Montesquieu, I. Kant, Spinoza, David Hume, James Madison....) 이것이 현재에는 '민주적 평화'론으로 오독되고 있으나, 위의 선현들이 통찰하였듯 기실 대내 평화·연합과 대외 공존·평화는 분리되기 어려움. 즉 평화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화주의의 산물임. 근대 이후 민주 공화국 건설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외 평화의 동시 구축이었음.

이렇게 볼 때 한국에 한정할 경우 중요한 세 가지 요체가 존재함. 즉 상호 인정과 공존이 내외 평화의 요체라고 할 때, 대내의 경우 최고 갈등을 초래하는 진영대결을 넘는 대화·타협, 국정 연속성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야하며, 대외의 경우 바른 두 국가론의 정립과, 미중 대결의 한반도의 삼투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임.

== 먼저 내부 차원은 ① 민주 대 반민주와 ② 지역갈등을 거쳐 이제 ③ 격렬

한 진영대결을 중심으로 끝내 ④ 세대, ⑤ 젠더, ⑥ 수도권-지방, ⑦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훨씬 심각해짐. 민주화 세대 특유의 관념이자 구도인 진영대결에 매몰되어 민주화 한 세대 만에 세대, 젠더, 수도권-지방, 계층 격차와 갈등이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음. “저(低)성장 고(高)갈등” 사회가 고착되어가고 있는 것임.

이 4대 격차와 갈등의 해소에 나라의 온 자원과 역량, 열정과 관심, 제도개혁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 국가소멸과 소멸국가로 치달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탈(脫)진영적 공공의제·공동의제·공화의제는 진영동원과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영의제·민주의제·권력의제에 비해 방치·실종·악화를 반복하고 있음. 공론(空論)으로 뜨겁게 타오르기만 하는 동안 아무런 힘도 관심도 실리지 않게 됨으로써, 진영의제·민주의제·권력의제에 비해 공공의제·공화의제·국가의제가 장기 압살되는 전형적인 “의제 증류현상”과 “증발현상”에 직면. 쇠락국가·소멸국가의 고전적 진행 행태요 경로임.

== 한반도 차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속해오고 있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의 ‘두 외국론’을 부정·비판·극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내부 보수의 한국 단독 대표론과 진보의 민족통일론 역시 이론적 실천적으로 극복·결합·지양할 필요가 있음. 빌리 브란트와 독일이 서독 보수의 ‘단독대표’론(할슈타인원칙)과 동독의 ‘2 민족 - 2 외국’론을 넘어, 상호 국가성·주권성·합법성·통치성을 인정한 ‘두 국가’론을 정립하여 이후 ‘공존’(현재)과 ‘통일’(미래)의 두 목표와 가치를 전부 평화적으로 성취하였듯이 한국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함.

그러나 한국은 독일 통일 당시에도 그것을 ‘민주 통일’, ‘평화 통일’, ‘점진 통일’, ‘동독 주도 통일’의 측면은 보지 못한 채, ‘흡수통일’ 측면 하나만을 갖고 오독하였듯이, 이번에는 다시 조선(북한)의 대(對)한국 근본 원칙인 ‘두 외국론’을 마치 ‘두 국가론’인 것처럼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음. 발표와 보도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오독은 한국의 정부당국, 학계, 시민단체, 언론 모두 동일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에서 ‘반(反)통일’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2023년에는 한국을 ‘적대’ ‘군사’ ‘영토평정’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두 국가론이 전혀 아니며, 최근 공개된 2026년 3월의 헌법은 한국과 조선의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두 국가론’이 아니라 ‘두 외국론’이라고 할 수 있음. 조선은 한국을 중국 및 러시아와 동일하게 ‘외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대한(對韓) 원칙 천명은, 일관된 ‘두 외국론’이지, ‘두 국가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두 국가론은 안정적이고 공고한 평화 공존을 위해 국가성·주권성·영토성·합법성·대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두 외국론처럼 미래 통일의 내적 상호적 근거와 가능성마저 완전 박탈하고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게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유, 평등, 인권, 자율, 공화의 최소한의 민주성과 정당성, 보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가성과 주권성의 인정을 넘는 포용과 환대는 난망함. 외려 비판적 접근이 필수적임. 한국은 항구적인 한반도평화를 통한 동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위해, 한반도에 내부의 단독대표론과 민족통일론, 그리고 조선의 두 외국론을 넘어 두 국가론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절실함. 먼저, 조선의 두 외국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부정 없이 이는 가능하지 않음.

==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대략 ‘권위주의 국가’ 절반, ‘민주국가’ 절반을 경험. 이제 광복 100년을 향한 시간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함께 가슴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세대와 세대, 여성과 남성, 지역과 지역, 진보와 보수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추진할 필요 절실.

포용, 공존, 절제를 통해 광복 100년의 잔칫상에는 세대와 세대, 젠더와 젠더, 수도권과 지방, 계층과 계층, 진영과 진영을 넘어 함께 민주와 공화, 자유와 평등, 정의와 관용, 자율과 창의, 복지와 형평, 내부평화와 세계평화가 온 누리에 차고 넘치는 인간국가, 모범국가, 세계국가, 보편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후대와 나라를 위해 다시 들메끈을 동여매고 숙연히 우리의 피와 땀을 바쳐야 할 숭고한 과제가 아닌가?

== 거듭 강조한 대로 평화는 내부 평화를 통한 항구적 한반도평화 구축과 세계평화 선도가 요체. 대내 평화[대화·연합·공화]와 대외 평화[공존·화해·안정]의 상호파상(波狀) 효과 -- 최고 수준의 내부 타협과 민주공화는 밖으로는 화해와 공존·평화로 연결. 이른바 대내 화합과 대외 평화의 연결.(*Concordia Domi Poris Pax.*) 국민동행(*Concordia Domi*)과 세계동행(*Poris Pax*). 전후 한국의 경로는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회복의 동시 성공을 통해 부족한대로 ‘세계역할’과 ‘세계기여’를 보여준 한 대표적인 사례.

== 미중갈등의 단순한 한반도 삼투의 저지를 넘어, 경계의 준강대국 한국의 역할을 통한 두 제국의 동아시아 평화로의 안내와 견인 역할을 감당해야 함. 대륙과 해양, 이념과 이념, 제국과 제국, 문명과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경계국가로서 한국은 과거에 자기희생을 통해 이러한 보편적 역할을 담당해 옴. 3.1운동과 동서연결, 한국전쟁과 세계질서 주조, 서울올림픽과 냉전해체..... 가치와 현실에서 이들의 보편적 세계역할과 세계기여는 너무도 확고함. 반도체, 조선, 기술, 특허, 한류에서 이제 한국의 세계연결과 세계공존, 세계평화의 선도는 명백함.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자기 희생이 아닌, 내부의 바람직한 민주공화국을 통한 경계의 세계 준강대국으로서 세계역할책임(stewardship)을 감당할 때임, 마땅히 그러해야함.